

통일을 위한 평화, 평화를 위한 통일

남북의 평화는 가능한가?

김창수 |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정책실장

남북의 통일을 위해서 평화 정착이 필요하고 통일의 완성을 통해 궁극적으로 평화가 정착돼야 한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는 1953년 체결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 그리고 남북 간에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관용과 공존의 문화를 내면화해야 한다.



남북통일은 궁극적으로 사람의 통일이기 때문에 남북이 공존해서 살 수 있는 연습이 필요하다.

사진은 6·15남북정상회담 때 처음으로 남북 정상이 만나는 장면.

2차대전 이후 형성된 세계질서에 편입되면서 한반도에서는 분단과 냉전의 역사가 시작됐다. 2000년 6월에 열린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에서 발표한 6·15 남북공동선언에는 한반도의 대결과 분단을 끝내고 평화와 통일의 새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7천만 겨레의 염원이 담겨 있다. 6·15 남북공동선언을 실천하는 것은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21세기를 평화의 세기로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한반도의 평화통일은 한반도에서 분쟁의 가능성을 약화시킴으로써 아시아의 안보환경을 크게 개선시킬 것이다. 무엇보다도 한반도의 통일은 아시아 국가들이 개입할 수밖에 없는 한국전쟁의 재발을 예방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한반도가 분단돼 있다면 언제든지 분쟁은 발생할 수 있다. 한반도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필연적으로 주변 국가의 개입으로 확대될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의 분쟁을 근원적으로 억제하는 통일을 이뤄야 한다.

통일에 대한 평화적 접근 필요해

지금까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대한

많은 논의들은 평화와 통일을 대립적인 개념으로 파악하고 접근해왔다. 평화

를 현상유지적인 것으로, 통일은 현상변경적인 것으로 바라보면서 평화와 통일을 대립시켜서 통일보다는 평화가 중요하다거나 평화보다는 통일이 중요하다는 이분법적인 시각으로 접근한 것이다.

하지만 평화와 통일을 이분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통일은 역사발전의 긴 과정이기 때문에 통일을 위해서도 평화정착이 필요하고, 통일의 완성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평화가 정착된다.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평화와 통일의 관계를 잘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은 다음과 같은 관계에 있다.

첫째, 한반도의 평화정착은 통일의 객관적인 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을 준다. 한반도 통일의 객관적인 환경이란 평화적인 통일을 이루할 수 있는 환경을 의미한다. 분단이 지속된 밀바탕에는 남북한의 군사적 대결이 자리잡고 있다. 남북한의 군사적 대결은 남북분단에 의해서 파생된 것이기도 하지만, 세계 자본주의 경제의 군사화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경제의 군사화는 독점자본이 높은 이윤을 실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경제의 군사화는 필연적으로 국가 상부구조의 특징으로 군사주의의 기초를 만들게 된다. 한반도의 평화정착은 이와 같은 군사주의를 완화시켜서 통일의 평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한다.

둘째, 한반도의 평화정착은 한반도 통일의 국제적인 환경을 마련한다. 한반도 통일문제의 민족주의적인 경향은 세계평화를 위한 보편성과 거리가 있게 된 것도 사실이다. 한반도의 통일문제를 세계평화단체들이 바라보는 보편적인 평화의 문제로 접근함으로써 한반도 통일이 아시아 평화와 직결돼 있다는 시각을 갖추는 것은 통일을 위한 국제적인 환경을 마련하는 일과 직결된다.

셋째,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통해서 통일과정을 준비하게 된다.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한국 사회 내부의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남북이 공존해서 살 수 있는 연습과 훈련이 필요하다. 통일은 궁극적으로 사람의 통일이기 때문이다. 서로 다음을 인정하고 함께 더불어 사는 것에 대한 준비가 없이 맞이하는 통일은 큰 혼란을 야기할 것이다. 평화문화의 정착은 다름을 인정하는 관용의 덕목을 키우고, 갈등을 평화롭게 해소하는 능력을 향상시

킨다. 남북의 사람 사이에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남북이 오랫동안 각각의 체제에 익숙해져 있는 것들을 서로 용납하고 관용해야 한다.

넷째, 한반도의 통일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평화가 정착된다. 1990년 합의에 의해 통일을 이룬 남북예멘이 1994년에 다시 내전 상태로 돌입한 것은 통일과정을 평화적으로 이끄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1990년 남북예멘 수뇌의 서명 날인으로 성립된 예멘통일이 정치적 통합과정의 시작일 뿐, 그것이 곧 정치적 통합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남북예멘은 일단 합쳐지기는 했지만 완전히 통합을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두 정치체제가 이면에서 제각기 권력을 유지하고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책동했던 것이다. 양측은 말로만 군통합을 역설하면서 내부적으로는 각기 독자적인 군사능력의 비축과 외국의 지지 세력 확보를 꾀했다는 사실에서 통일과정을 평화적으로 이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고 있다. 통일과정을 평화적으로 이끌어낼 때 궁극적으로 평화가 정착된다.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해야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가장 노력해야 할 것은 무엇보다도 1953년에 체결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정전상태에서는 갈등과 대결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남과 북의 당국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하며 주변 강대국들은 분단에 책임이 있는 만큼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특히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적대 정책에서 벗어나 북한을 테러지원국가로 지정한 것을 풀고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를 완화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문제는 반세기 가량 지속된 한반도 정전체제의 특수성 때문에 법리적으로나 사실적으로 매우 복잡한 성격을 띠고 있다. 국제적인 관례로 보더라도 정전협정이 40년이 넘게 지속된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한반도 정전상태에 대한 국제법적인 시각 역시 다양하다.

평화체제 수립은 남북 당국의 통일정책에서 현안이 되는 문제다. 통일된 민족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정전체제라는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가 구체적으로 요구된다. 따라서 평화체제 수립에 대한 논의는 매우 현실적이고 실천적이어야 한다.

그동안 국내학계에서는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에 대해 정전협정의 성격과 평화협정 체결의 당사자 문제에 대해 주로 법리적인 차원에서 논의를 집중했던 것이 사실이다. 게다가 은연중에 평화체제에 대한 논의를 실용적인 관점보다는 이데올로기적인 관점에서 진행시켜왔다. 그 결과는 당연히 남북 당국 가운데 어느 한편의 정당성과 주도성 문제로 초점이 모아지는 것이었기에 정전체제를 변

경시키고 평화체제를 수립하기 위한 현실적인 정책은 논의될 수 없었다. 물론 이런 수준에서 논의가 진행됐던 것은 현실적인 정책 수립을 위한 상황이 조성되지 않았다는 상황적 제약에서 비롯되는 바도 컸다.

체제의 정통성 경쟁과 선전차원에서 진행된 평화협정 논의는 그렇지 않아도 민족 내적인 문제와 국제적인 문제가 얹히면서 복잡하기만 한 평화체제 수립을 더욱 복잡하게 만든 요인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여섯차례의 4자회담 본 회담의 진행으로 평화체제 수립에 대해 이제 더 이상 명분론적인 논의에 매달리고 있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이제 평화체제 수립은 논의나 검토의 단계가 아니라 정전체제라는 현상을 변경시키고 평화체제라는 새로운 상황을 창출하는 실천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관용과 공존의 문화를 내면화해야

한반도의 궁극적인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는 남북이 공존해서 살 수 있는 연습과 훈련이 필요하다. 통일은 궁극적으로 사람의 통일이기 때문이다. 서로 다른 인정하고 함께 더불어 사는 것에 대한 준비가 없는 상태에서 평화는 이뤄질 수 없다. 평화를 위해서는 서로 다른 인정하는 관용의 덕목을 키우고, 갈등을 평화롭게 해소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특히 한국사회의 정신적 건강함과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냉전문화를 다원주의적, 평화지향적 문화로 바꿔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평화지향적 세계관이 내면화돼 평화문화를 정착하는 것은 일회적 사건이나 도덕적 윤리 혹은 정치적 비판에 대해서 쉽게 이뤄질 수 없는 장기적인 과정이다. 그것은 인내심 있고 포용력 있는 교육과 홍보, 계몽 등을 통해 서서히 생겨나는 정치심리적 변화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그것은 사상의 자유, 다양성과 차이에 대한 존중, 비판적·이탈적 언행에 대한 관용, 폭력을 배제하는 합리적 태협과 협상의 존중, 민주주의적 질서의 내면화, 이웃과 생활세계에 대한 이완된 태도, 평화에 대한 일상적 욕망을 유발하는 변화가 되지 않으면 안된다. ■

김창수씨는 고려대 철학과를 졸업했다. '통일맞이 문의환 목사 기념사업'과 '자주민주평화통일 민족회의' 정책실장을 겸하고 있으며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의 정책실장으로도 상근하고 있다. 저은 책으로 『멋진 통일운동 신나는 평화운동』 등이 있다.